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마지막 TV토론

# 文 “당정일치”... 安 “(당)靑 거수기”

### 문재인 “정당책임정치 필요하다는 뜻” vs 안희정 “여당이 대통령 하급기관 되는 패턴 못 벗어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0일 ‘당정일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전 대표는 ‘당정일치’를 주장했으나, 안 지사는 이를 ‘당을 청와대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시도’라면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SBS사옥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자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항상 만나서 대화하는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국정협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당정분리가 우리와 맞지 않았다”며 “당정일치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인 총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문 전 대표는 “그렇다.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에 “(이미) 당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며 “그러면 (당)이 청와대 거수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집권여당을 실질적으로 거수기로 만드는 것을 해도 되느냐”고 문 전 대표를 물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공천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책에만 관여할 것”이라며 “세력이 커야 지지를 받는 것이고 좋은 거다. 안 지사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긴밀히 협의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며 “때로는 추천받고 때로는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을 함께하

는 민주당 정부”라며 “민주당 정부의 성격으로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거듭 “문 전 대표가 이끄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을 지배하는 낡은 관행을 답습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두 사람은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안 지사는 토론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의 방식은) 전혀 새롭지 못하다”며 “대선 후보자가 자기 세력을 늘리고, 캠프 크기를 늘려서 당을 지배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 후에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하급기관이 되는 이 패턴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문 전 대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의 경선운동과 집권은 앞서 여섯 명의 대통령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또한 “다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여야 한다. ‘정당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의 총재를 겸하면서, 당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재정을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며 “정당과 함께 정책, 인사 등을 협의하고 때로는 추천 받기도 하는 정당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安 ‘청찬’·文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대연정론’을 내세운 안희정 충남지사를 높이 사는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 인사 영입을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 중 주도



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 토론을 통해 이같이 두 후보에 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 그는 대연정론과 관련, “안 지사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반면 문 전 대표에겐 “문 전 대표가 뭘 할지 모르겠다”며 “법인세 세율을 마지막에 올리는 서민이 세금을 내야하고 결국 가득득자를 위한 정권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 확

대를 주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영입하고 언론개혁을 말하면서 말한 것과 상반된 인사를 영입했다”며 문 전 대표 캠프의 인사 영입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해 지도자로서는 불안정하다. 이런 불안정 문제는 말의 바꿈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저를)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시장뿐”이라며 “일방적인 말씀을 되풀이하면 이 시장이 편향된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맞섰다. /뉴스

#### 세월호 미수습자 피해구제 개정안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 상황을 본 뒤에 소송제기 등의 법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기권11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기존 1년 이내였던 세월호 배상금 및 보상금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기존 1년 이내 신청에서 5년으로 늘려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여부의 진행상황을 본 뒤 소송제기를 결정토록 했다. /뉴스

#### 김덕연 완주군의회 보선 후보, 공약 발표

완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무소속 김덕연 후보가 30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후보는 “전)완주군 새마을협의회회장, 전)사랑의 연탄나눔운영위원장, 현)완주군 이장연합회장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완주군의 정책과 방향,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해 주민과 함께 생활속으로 더 다가가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완주군 6개면 자연발생 유원지 조폐개정을 통한 3개월 영업 운영 추진 ▲완주군 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수당 인상 추진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확대지원 추진 ▲완주군 경로회원 위한 거점목욕탕 건립 추진 등 9개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화산면 외곽 출신으로 전)더불어민주당당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완주갯감축제 제정위원회 홍보위원장, 전북 이·통장 협의회 부회장을 등을 역임하고 있다.

수상 이력은 안전행정부장관상, 행정부장관상, 산림청장상, 전북도지사상 3회, 완주군수상 3회 등 다수의 수상이력이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교섭단체 4당 ‘45일 인수위법’ 합의 실패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불발됐다. 정 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45일간의 인수위 기간 합의를 위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통과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수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두고 위원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당 법안이 계류됐다.

이날 직권상정 합의 실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만 인수위 기간을 들 수 있게 됐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가능하도록 돼있다. /뉴스

## “지방교육자치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야”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 등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속성,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부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혜수 의원이 토론

회를 진행했으며, 양용모 의원을 비롯한 전북대 반상진 교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 전북일보 조상진 논설위원, 전교조 김재균 정책실장,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교육부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양용모 의원은 “국정교과서, 학교총량제, 교육부 개.폐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교육부는 적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2010년 직선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했음에도 정부는 본권이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찬성한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는 논란이 일 것 같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반상진 교수는 “교육부의 관료중심 체제가 교육문제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사결정의 다변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호성 교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해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의 지속성,중립성,자율성 등을 위해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폐지’ 정책토론회 개최

지보다 기능을 축소해 국가교육의 시스템 관리,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실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관할한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균 팀장은 “일관성,안정성이 필요한 교육임에도 교육부는 정권에 휘둘리고 있어 적폐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국가교육을 총괄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